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정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는 서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① 국가라는 정치 주체에 국한하여 정치의 의미를 규정한다.
- ②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③ 국회가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④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⑤ 국가와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2. 법치주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최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종래의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현대적 의미로 발전하였다. 이는 법에 의한 통치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A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만 있으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그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보는 B로 인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다.

- ① A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 ② B는 법익 보호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⑤ A와 B 모두 법률에 근거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배제가 요구된다. 이에 반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B는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 ① A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 ② B는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A와 달리 B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④ B와 달리 A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 ⑤ A와 B 모두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외 국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된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말해 볼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인 A를 실현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사고에 처한 재외 국민이 자력으로 이를 수습할 경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인 B를 실현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 ① A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② B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의 근거가 된다.
- ③ A와 달리 B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들 수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⑤ A와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5.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 갑국에서는 지난 몇 차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고, 의회 내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서 빈번한 의회 해산과 행정부 수반의 교체로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 을국에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불일치하게 되었다. 의회가 법률안 제출권을 독점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정치적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 ①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 ⑤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모두에서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주민 참여 제도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도	해당 사례
(가)	○○군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 주민들은 하수 처리장 악취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나)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 투표에서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무산되었다.
(다)	□□도 의회 지역구 의원 A는 대규모 산업 단지 유치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되었다.

<보 기>

- ㄱ. (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하면 지방 자치 단체장이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ㄴ. (다)의 대상에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포함된다.
ㄷ. (다)와 달리 (나)는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제도이다.
ㄹ. (가)와 (나)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형사 제재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된다. B는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A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 등의 처분을 뜻한다.

<보 기>

- ㄱ. A에 해당하는 구류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ㄴ.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B에 해당하는 보호 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
ㄷ. B와 달리 A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헌법에 규정된 주요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행사 시 B의 동의, C의 장(長)의 제청, D의 제청 등의 견제를 받는다. A는 E를 임명할 때 C의 장(長)의 제청을, 국무 위원 임명 시 D의 제청을 받아야 한다. 또한 헌법은 C의 장(長), F의 장(長), D, E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B에게 부여하여 A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면서 각 기관에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A와 B, 그리고 C의 장(長)이 F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F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① A는 B에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국정 감사를 실시한다.
② B는 A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C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한다.
④ D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E는 F의 탄핵 결정 이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시장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배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갑은 폐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이후 갑은 항소심 계속 중 폐쇄 명령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에 (가)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A가 갑의 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B에 (나) 을/를 청구하였다. 이에 B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배출 시설 설치·사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판한다.
② B의 결정으로 갑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은 취소된다.
③ B와 달리 A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④ A는 직권으로 B에 (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가)와 달리 (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기업의 직원 갑은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사용자 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기업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참가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다음은 갑의 구제 신청에 대한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 요지이다.

- 갑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갑에 대한 해고는 쟁의 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① 갑과 달리 △△기업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에서 신청인이 될 수 없다.
②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가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면,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④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중앙 노동 위원회가 을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갑은 을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합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법질서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소유권의 불가침성과 A를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생산 수단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던 소유권이 시대와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반영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그에 부과된 의무를 강조하는 B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 기>

- ㄱ. A는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 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원칙이다.
- ㄴ.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법률 규정은 A에 근거한다.
- ㄷ. B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사유 재산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ㄹ.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B에 근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마)의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변호인의 주장이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	변호인의 주장
(가)	갑의 폭행은 적법한 체포 과정에서 도망가는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나)	을의 폭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병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병의 나이가 13세 11개월에 불과함.
(라)	정의 폭행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마)	무는 자신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것임.

- ① (가)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나)에서 법원은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다)에서 변호인은 병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④ (라)에서 변호인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 ⑤ (마)에서 변호인은 무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A는 면접을 위해 친구 B의 양복을 빌려 입은 후 갑에게 세탁을 맡겼다. 갑은 세탁소 내부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수개월 전 을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을이 수리를 약속하였지만, 이후 을은 갑의 수차례 요청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리를 계속 미뤄 왔다. 결국 수도관 파열로 갑의 세탁 시설이 침수되어 갑이 세탁물을 옮기고 있는데, 이를 보고 갑을 도와주던 갑의 중학생 아들 병이 실수로 표백제를 쏟아 B의 양복이 변색되었다. 한편 양복을 찾으러 온 A가 파열된 수도관에서 뿜어져 나온 물에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었다.

- ① 갑은 B에게 양복의 변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은 갑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의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갑이 세탁 시설 피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병이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A의 부상에 대해 갑이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을이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14~1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상 혼인한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 용돈으로 마트에서 게임기를 구매하였다. 한편 병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신이 낳은 B를 양육하고 있었다. B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 자전거 대리점(사장 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정에게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정은 연령을 이유로 B와의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그 자리에서 B는 평소 원했던 고가의 한정판 자전거를 보고 정에게 구매 의사를 거듭 밝혔고 정은 고민 끝에 B와 그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평소 성격 차이가 심했던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갑이 갖게 되었다. 얼마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갑과 병의 혼인을 반대하던 B는 친권자 병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였으나 병의 반대로 독립할 수 없었다. 이후 갑과 병은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C는 입양된 후 고가의 자전거를 조건 없이 증정하는 정의 ○○ 자전거 대리점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

14. 위의 사례에 나타난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A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C가 당첨된 고가의 자전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갑 또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③ 정은 B의 매매 계약에 대한 병의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갑과 병의 혼인 후 정은 갑에게 B와의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정과 B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병은 정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를 진다.

15. 위의 사례에 나타난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병이 A를 입양한 이후에도 을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 ③ 갑과 병의 혼인 후 갑이 사망한 경우,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④ C와 달리 A의 입양 시 가정 법원의 허가가 요구된다.
- ⑤ C가 경품 행사에 당첨될 당시, C와 달리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임.)



우리 ○○단체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A입니다.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B의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와 연대하여 우리의 이익 추구가 공익과 충돌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취재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D가 우리 단체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 ① A와 달리 B는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 ② B와 달리 C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③ C와 달리 A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④ A, B와 달리 D는 사회 구성원에게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⑤ A, C, D와 달리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주차된 을의 차량 유리창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 병에게 발각되었다. 병이 계속 쫓아오자 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병에게 폭행을 가하였지만 결국 체포되었다. 이후 검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갑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소송의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① 검사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하면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 하여 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갑은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이 확정된 후 갑이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병이 갑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생존과 안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제 사회는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정글과 같다. 이러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별 국가는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을: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항상 생존과 안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를 정글이 아니라 평화를 가꿀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 ①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국제 규범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설명할 때 힘의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국제 사회에 존재한다고 본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제 사회에서 일관되게 지속된 관행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성립된다. A의 성립에 있어 법적 확신이 필수적 요건이지만, 이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명시적 합의인 B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국가의 입장이나 국제기구가 채택한 결의 내용 등이 법적 확신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① 우리나라에서 A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 ②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는 개인은 B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B를 위반한 국제기구라도 해당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A와 달리 B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 ⑤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비준이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갑국의 선거 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려 합니다. 현재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8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최대 득표한 후보자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또한 갑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에서 최대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갑국에서는 의회 의석을 확보한 5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모두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1>은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이고, <자료2>는 갑국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입니다. 이에 대해 분석해 볼까요?

<자료1>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

- 의회 의원 정수(定數) 80명과 유권자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은 유지하지만, 선거구를 20개로 축소하고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최대 2인까지 후보자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함.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함.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현재의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33% 인구 편차'에서 '상하 20% 인구 편차'로 변경함.

<자료2> 갑국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

당선을 위한 조건으로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라는 제한을 둬, 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만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함.

(가)



<보 기>

- ㄱ. 갑국의 개편안에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ㄴ.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현행과 달리 개편안은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ㄷ.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의 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와 동일합니다.
- ㄹ. 갑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